

아태지역의 상보적·단일적 광역FTA 형성 가능성: RCEP와 TPP의 수렴을 중심으로

강원식*

목 차	
I. 서론	수 있다
II. TPP-RCEP에 관한 미중 대결론적 관점	IV. 상보적·단일적 광역경제통합의 가능성
III. TPP-RCEP에 관한 상보적·단일적 관점	1. 중국의 TPP 참가 가능성
1. 정치안보적 관점으로만 보지 말자	2. 미국의 정책유연화 가능성
2. 광역FTA 형성의 경제적 추동요인을 고려하자	3. ASEAN의 통합노력 가능성
3. RCEP와 TPP는 서로 조화될	4. 한국의 적극적인 교량역할 가능성
	V. 결론

| 논문요약 |

한중일 FTA, RCEP, TPP 등 아태지역의 광역FTA 움직임과 관련하여, 이를 미중 간의 패권갈등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상보적 관계로 파악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광역FTA는 새로운 경제무역규범을 제정하려는 시도이므로 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광역FTA의 출현은 역내 공급사슬의 확대와 스파게티 볼 현상의 해소 등 기존 양자FTA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RCEP와 TPP가 서로 갈등적·병행적으로 존재하면 광역FTA 실현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셋째, RCEP와 TPP는 ①느슨하고 개방적 조

* 가톨릭관동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적인 APEC의 틀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고, ②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고, ③양자의 특성과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속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미 중국은 미중 투자협정 체결 및 TPP 참가(또는 미국을 포함하는 FTAAP)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도 RCEP와 TPP가 길항관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며 또한 중국이 참가하지 않는 TPP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중국을 초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ASEAN도 TPP와 RCEP 간의 실질적인 린치핀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역내 광역경제권의 대결은 역내 전체의 비용증대로 나타난다. 모두가 손해를 보기 전에 조금씩 양보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관련국 모두의 노력이 집중될 때 비로소 아태지역의 호혜적 경제통합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TPP, RCEP, FTAAP, 광역FTA, 한중 FTA

I. 서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이 빠르게 증가하고 WTO 차원의 다자무역자유화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양국 간 FTA 체결이 활발하게 되었다. 아태지역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일제히 FTA를 추진하고 다수의 양자 간 FTA를 체결하였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의 양자FTA 중심전략에서 탈피하여 FTA를 다자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특히 EU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시장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이로 인한 수출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역내 시장 확대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도 RCEP, TPP, 한중일 FTA 등 FTA의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¹⁾

1)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미국의 주도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미주 5개국과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4개국,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등 총 12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RCEP

이와 같은 광역FTA(region-wide FTA) 시도는 경제블록 간 주도권 경쟁으로 나타나고, 지역무역협정에 국제정치적 역학관계가 투영되는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은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착종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TPP와 RCEP도 주도세력과 경제통합 특성의 차이로 인해 경합관계로 인식되며, 미국과 중국의 견제와 갈등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아태지역의 광역FTA 움직임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 지역의 광역경제통합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특히 TPP와 RCEP가 미국과 중국 두 진영 간의 적대적 대립을 반영하지도 또는 반영해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 상보적·단일적으로 발전하여야 함을 논설하고자 한다.

II. TPP-RCEP에 관한 미중 대결론적 관점

아태지역은 미국의 경제 및 정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의 전략 중심은 동쪽으로 이동하였지만,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반테러 정책에 몰두하느라 동아시아지역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또한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지역 내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아시아 경제, 특히 동아시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지역협력이 확대되었고, 광역FTA 추진 등 여러 가지 협력과 대화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스스로가 주변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및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 Asia)’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광역FTA 움직임인데, TPP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이른바 ASEAN+6(APS)의 총 16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스스로 높은 수준,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사실상 ‘아시아 회귀’를 목표로 역내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수단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王雪峰 2014, 110). 즉 중국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TPP를 통하여 아시아의 고도경제성장을 공유하면서 아태지역의 지역협력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중국의 대두를 억제하려 하는데, 특히 미국은 중국이 TPP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TPP 참가조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李向陽 2012.).²⁾ TPP는 미국의 ‘Anyone But China’ 전략 및 대중국 봉쇄 정책(containment policy)의 표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가자본주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는데, 아태지역의 광역FTA 움직임은 이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는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도 정부에 의해 유무형의 지원을 받는 국유기업이 금융, 에너지, 통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대부분 독점하고 정부가 국유기업을 통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를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라 하는데,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국유기업 문제는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³⁾ 또한 TPP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의 하나로 되어 있다.

특히 중국은 산업 고도화와 자주창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출보조금과 국산품 우선구입 보조금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WTO 의무위반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미국은 이에 대해 상쇄관세 발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미국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⁴⁾ 미국은 TPP를 통해 중국의 국

2) 王雪峰은 TPP의 높은 표준은 자유무역의 경제분야를 벗어나 독립국가의 내정과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정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王雪峰 2014, 112).

3) Ian Bremmer는 『자유시장의 종언(The End of the Market)』에서 국가자본주의가 시장경제의 위협으로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자본주의 확대가 WTO를 축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정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The Economist 2012).

4) 미국 의회 자문기관인 미중경제안전보장조사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2011년 10월 “중국에서 국유기업과 국가자본주의 분석(An Analysis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State Capitalism in

가자본주의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국가자본주의와 자유무역체제의 대결은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무역레짐을 둘러싼 미중 간의 아키텍처 경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에서 퇴조하는 경향을 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2000년 이후 빠르게 대두된 중국의 부상과 대비된다. 멀지 않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일본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도 일반적이다.⁵⁾ 세계적 차원의 미중 역전과 아시아 차원의 중일 역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TPP 주도는 경제실리와 대중국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명한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래의 세계경제레짐 구축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깃발(American flag)을 게양하여야 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TPP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Davis 2011).

따라서 미국의 TPP 정책은 첫째, 중국을 배제한 채로 TPP 교섭을 타결하고, 그 후에 이를 APEC 회원국으로 확대하여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중국에 대해 TPP 참가조건으로 국가자본주의 수정·포기와 규범 준수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둘째, 만일 중국이 국가자본주의를 견지하고 TPP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세계무역질서에서 중국을 고립화한다는 것이다.

Ⅲ. TPP-RCEP에 관한 상보적·단일적 관점

아태지역 광역FTA 구상이 진전되는 배경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

China)”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유기업은 중국경제의 원동력으로 거액의 정부보조금과 자금조달, 세제혜택, 규제우대로 지탱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미중 간 무역마찰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5) 2014년 9월 IHS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내수가 2013에서 2024년까지 거의 4배 급증하여 2024년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중국 28.25조 달러, 미국 27.31조 달러)이 되고, 인도 경제는 2023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 한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갈등의 광역FTA가 아니라 상생의 광역FTA로 이끄는 요소도 분명히 있다.

1. 정치안보적 관점으로만 보지 말자

광역FTA 구상에는 당연히 참가국의 정치·외교·안보적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RCEP와 TPP 등 아태지역의 광역FTA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를 미중 간의 세력경쟁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관측이라 할 수도 있다. 또한 역내 광역경제통합을 통하여 북한 핵위협, 역내 영토분쟁 등 불안한 정치안보 문제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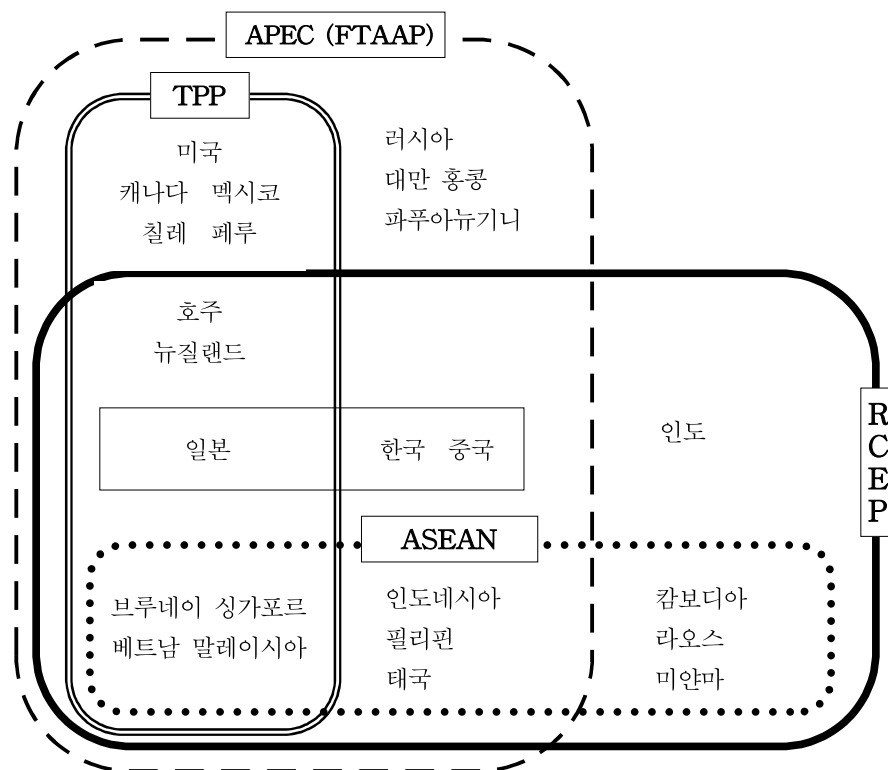
이리하여 유럽에서 EU와 러시아 간의 갈등, 아메리카에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MERCOSUR(남미공동시장) 간의 갈등을 반영하여, 같은 논리로 아태지역에서 RCEP와 TPP가 충돌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한국무역협회 2014d, 119). 즉 유럽에서는 EU(European Community)와 EEU(Eurasian Economic Union)가 서로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몰도바, 조지아 등 구소련국가의 가입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한 중남미에서도 남미공동시장과 태평양동맹이 서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아태지역에서 이러한 대립구도를 적용하는 것이 완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EU와 EEU, PA와 MERCOSUR는 회원국이 서로 중첩되지 않는 조직이므로 서로 배타적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⁶⁾ <그림 1>에서 보듯이, 회원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RCEP와 TPP의 경우에 경쟁갈등 구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RCEP 16개국과 TPP 12개국 가운데 각각 절반이 넘는 7개국이 이미 중복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RCEP와 TPP 등은 경제통합 움직임이므로 이를 정치·안보적 관

6) 2014년 10월 현재 EU의 회원국은 서유럽 및 중부유럽의 28개국이며, EEU는 구소련권의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개국이다. Pacific Alliance는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4개국이며,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이들의 회원국은 서로 중첩되지 않는다.

점에서만 특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세력경쟁이 실제로 블록화하여 서로 간에 배타적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징후는 현재 없다. 아마도 미국과 소련 간의 동서냉전시대를 뚜렷하게 기억하기 때문이겠으나, TPP와 RCEP를 미중 간의 블록 간·진영 간 대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아태지역 광역FTA 구조

따라서 아태지역의 광역경제통합 움직임을 관측하면서 정치안보적 고려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만 함몰되어 경제적 측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다.

2. 광역FTA 형성의 경제적 추동요인을 고려하자

광역FTA를 향한 추동원인은 기존 양자FTA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다자FTA를 추구함으로써 무역, 투자, 생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광역FTA를 추동하고 있는 경제적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내 소비시장의 확대 필요성이다. 아태지역은 역내의 생산공급사슬(production supply chain)이 특히 발달한 지역으로 역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제도적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IT와 자동차 등 제조업분야에서 생산거점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원재료 조달로부터 생산과 판매까지 글로벌화 되어, 이와 같은 공급사슬의 효율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것이 21세기형 무역(21st century trade)의 특징이다(Baldwin 2011).⁷⁾ 기존의 양국 간 FTA로는 공급사슬의 확대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양국 간 FTA에는 공급사슬이 전개되는 국가의 일부밖에 커버되지 않고, 또한 설령 같은 공급사슬에 들어 있는 모든 국가 간에 복수의 양자FTA가 체결된다고 하여도 무역규칙 간의 부정합현상(스파게티 볼)이 나타난다(馬田 啓一 2014a, 21-23). 결국 공급사슬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가 FTA가 필요하다. 광역FTA 참가를 통해 기업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범위를 넓히고, 국제생산네트워크의 확대도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벗어나기 위해서이다.⁸⁾

7) 리처드 볼드윈에 따르면, 생산이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적으로 하나의 가치사슬(value chains)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생산 네트워크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상품 양허에 초점을 맞춘 FTA의 특혜 효과는 반감된다. 생산의 초국적화와 수많은 가치사슬로 연계된 현재의 생산과 무역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국제무역 분업 구조에 기반하여 체결되는 FTA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현재의 무역체제는 '21세기형 생산과 무역과 20세기형 무역규칙'으로 짜여졌다는 것이다. 21세기형 무역규칙이란 공급사슬의 효율화를 통하여 기업이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21세기형 무역에서는 기업의 국제생산네트워크를 저해하는 정책과 제도는 모두 무역장벽으로 되고, 무역규칙의 중점은 국경조치(on the border)에서 국경내 조치(behind the border)로 옮겨간다.

8)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 애초 기대효과보

이는 위의 첫째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s)과 관련하여 특히 심각하게 이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제조품의 경우, 원산지규정은 ①통합품목분류(harmonized system)에 규정된 세 번 변경 기준, ②부가가치 기준, ③생산공정 기준 등 3가지 유형이 적용되고 있는데, 아태지역에서는 3가지 가운데 하나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3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복합적이고 상이한 원산지규정은 아태지역 내 FTA 간의 이질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생산네트워크 내의 무역을 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상이한 원산지규정은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역내 국가들이 체결한 FTA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가 약 63.8%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을 뿐, 여타 FTA의 활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이승주 2013, 96-97).⁹⁾

셋째, 다른 지역의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다. 유럽의 EU, 아메리카의 NAFTA 및 MERCOSUR 등 여타 지역에서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전환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역내 광역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FTA 설립을 향한 당초의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에 상응하기 위해서도 RCEP와 TPP도 통합적·상보적이어야 한다. 물론 TPP와 RCEP이 배타적인 조직이고, 미중이 이를 통해 공급사슬을 배타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세계화가 급속

다 반감되는 현상이다. 대상국별 또는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서로 얽히고설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의 국수가닥과 닮았다는 뜻이다. 누들 볼(noodle bowl) 현상(문제)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RCEP는 ASEAN을 허브로 하여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가 스포크로 되는 <5개의 'ASEAN+1' FTA>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개의 FTA는 체결시기와 내용(합의항목과 범위)이 서로 다르다. 체결시기와 내용이 다른 FTA가 난립하게 되면 스파게티 볼 현상이 생기는데, 동아시아에는 무역과 투자에 의한 국제적 생산망 내지 공급사슬이 형성되어 이것이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되고 있는데 비하여, 동아시아 각국 간에 체결된 FTA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장애로 되어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다(Baldwin 2013; 西口清勝 2014, 244-245).

9)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FTA 체결에 대해 높은 활용도와 만족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를 FTA와 관련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다고 한다(한국무역협회 2014b).

도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그런 배타적 광역FTA의 병립은 여러 양자FTA가 난립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파게티 볼 현상을 가중시킬 뿐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광역FTA 추동요인을 감안할 때에도 미중대결론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3. RCEP와 TPP는 서로 조화될 수 있다

RCEP와 TPP 회원국은 일부가 중첩되지만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며 주도세력도 다르다. 주도세력과 경제통합의 특성 차이로 인해 경합관계로 인식되며,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①느슨하고 개방적 조직인 APEC의 틀 내에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고, ②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고, ③양자의 특성과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속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먼저 첫째, RCEP 참여국은 APS인데 APS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초청받아 참가(APE)하고 있으며,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하면 모두 APEC 회원국이다. 또한 TPP 참여국도 모두 APEC 회원국이다. 역내의 경제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확대되어야 하고, RCEP와 TPP 양자 모두 참여에 대해 열려 있다.

둘째, 양자는 모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참가국을 확대하려면 자유화 및 개방수준에 대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특히 RCEP는 개도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다자협상 일괄타결방식이나, TPP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양자협상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특히 TPP가 회원국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규약 적용의 유연성이 불가피하다.

셋째, 양자는 모두 참여에 대해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 FTA/RTA와의 공존을 표방하는데, ‘스파게티 볼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도 양자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RCEP와 TPP에는 갈등요소가 있지만 조화의 공간도 있으며, 경제실리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화적 상보적 측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함은 틀림없다. 그렇지 못할 경우, 스파게티 볼 현상을 해소하

지 못하고, 그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임반석 2014, 101).

IV. 상보적·단일적 광역경제통합의 가능성

TPP와 RCEP는 이상과 같이 상보적·단일적 측면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하와 같은 움직임을 감안할 때, 실제로도 상보적·단일적 조화의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1. 중국의 TPP 참가 가능성

중국의 FTA 전략은 정치·경제·외교·안전보장정책을 통합한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중국은 ①경제발전에서 규모의 이익(scale merit) 실현, ②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③중국위협론의 해소, ④대만독립 등 분리독립세력의 억제, ⑤국제환경 특히 주변환경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2014년 11월 현재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지역과 FTA를 체결하고, 7개국·지역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¹⁰⁾

그러나 TPP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의 FTA에 대한 우려와 참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이라는 딜레마,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먼저 TPP 참가 반대론자들은 미국 주도로 형성된 TPP가 중국에게 불리하므로 참가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중국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없으므로 관세가 없으면 괴멸적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②중국의 금융시스템은 아직 취약하므로 금융업의 대외개방은 거시경제의 불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③중국의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의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에 따르면 제조업의 쇠퇴가 가속화하여 고용문제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 ④중국의 하이테크산업과 하이엔드서비스업은 초보단계이므로 적절한 정책

10) <http://fta.mofcom.gov.cn/index.shtml>. (2014년 11월 15일 검색)

보호가 필요하며 전면 개방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중국은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여야 하며, 현재 중국이 TPP 참가에서 문제시되는 농업, 금융, 환경·노동기준, 하이테크 등 분야에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이 진전되고 경제발전이 가속되었듯이, TPP 참가를 통해 개혁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TPP가 국제경제무역의 기존 규칙을 변경하고 새로운 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참여함으로써 발언권을 얻고 자국에 유리한 규칙 설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만일 참여하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배제되고, 나아가 새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셋째, 중국이 참가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TPP가 성립되면, 중국은 관세감면 등의 우대정책을 가진 참가국에 비해 경쟁에 불리하게 된다. 그 결과로 일부 수출제품은 시장점유율을 잃고 제조업은 TPP 참가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 게다가 TPP의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면, 부품 등 중간재 생산도 이전 대상으로 될 수 있다(關志雄 2014).

당초 중국 정부는 TPP에 대해 소극적이었으나, 2013년 봄에 시진핑·리커창(習近平·李克強) 정권이 성립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을 공식 언명하고 있으며,¹¹⁾ 나아가 미국과 ‘고수준의’ 투자협정을 맺기 위해 ‘투자전 내국민대우(pre-establishment national treatment)’와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채용하는 약속도 하고,¹²⁾ 2013년 9월 29일 중국(상해)자

11) 2013년 5월 30일 중국 상무부는 “신중한 연구를 거쳐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TPP 교섭참가의 장점과 단점 및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고, 2013년 9월 3일 이극강(李克強) 총리는 TPP를 포함하여 지역협력제도를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도 9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TPP 참가국들과 교섭 진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보교환을 바라며 동시에 국내 산업 부문의 의견도 모아가면서 참가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그 후 2013년 12월 16일에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중국에게는 미국 주도의 TPP와 같은 다른 협정도 참여의 길이 열려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12) 중국과 미국은 2013년 6월 7-8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정보를 제공하고 양국 간 투자협정을 협의하자고 합의하였고, 동년 7월 10-11일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는 ‘고수준의’ 투자협정 교섭 개시가 정식으로 합의되었다. ‘고수준의’ 투자협정이란 ‘투자전의 내국민대우’와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중국은 WTO 협정과 150개 이상의 양국 간·지역 간 투자협정에서 ‘투자전 최혜국대우(pre-establishment MFN treatment)’는 부여하고 있으나 내국

유무역시험구를 발족함으로써 TPP 참가를 위한 포석을 시작하였다.¹³⁾ 이 대로 가면 미중 FTA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이다.

사실상 2001년 WTO 가입으로 중국에서는 시장자유화와 국유기업개혁이 진행되어 왔으나, 그 후 자유화 속도가 둔화되고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부문의 비중확대와 민간부문의 비중축소)’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정부의 시장개입 경향이 강화되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WTO 가입 시에 약속했던 경제개혁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여전히 금융과 에너지 등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산업부문이 많다.¹⁴⁾ 시장경제화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고 관료의 자유재량 여지는 크다. 그 때문에 관료에 의한 오직과 부패도 만연해 왔다. 그러나 소득과 부가 국가와 국유기업에 집중하여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그 결과로 개인소비가 계속 확대되지 못하고 민간기업의 발전도 저해되었기 때문에, 국가자본주의체제로는 고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도 생기고 있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수정하여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개혁을 촉구하는 움직임이다(關志雄 2012).

직접적으로 중국이 TPP 참가에 긍정적으로 돌아선 이유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TPP 참가는 TPP를 중국포위망 구축에 이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 둘째, TPP 참가를 통하여 중국 국내의 구조개혁과 경제효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黃海洲 20

민대우에 대해서는 ‘투자후(post-establishment)’밖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일부 산업을 제외한 산업자유화 ‘포지티브 리스트’밖에 교섭하지 않아 왔다. ‘네가티브 리스트’를 받아들이는 것은 리스트에 오른 분야만을 예외로 하고 ‘성역 없는 투자자유화(on the table)’에 동의한 것이다(金堅敏 2013, 23-24).

- 13) TPP 참가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업, IT산업 등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금융·서비스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에 대해 중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먼저 시험구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일부 기업과 산업에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선행함으로써 그 영향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금융, 해운, 의료서비스, 네트워크서비스 등 18개 업종에서 처음으로 ‘투자전 내국민대우’와 ‘네가티브 리스트’가 채용되었다.
- 14) 중국공산당은 1999년 <국유기업의 개혁·발전의 몇가지 중요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①안전보장 관련산업, ②자연독점산업, ③공공재·서비스 제공 관련산업, ④기간산업 및 하이테크산업에 대해서는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이외의 분야에서도 국유기업이 여전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3). 셋째, 현재 미국은 TPP와 TIP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국은 TPP 참가를 통하여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관여하여야 한다. 넷째, TPP가 APEC 전체로 확대되어 마침내 FTAAP로 된다면, 이로써 최대의 수혜국은 사실상 중국이 될 수 있다.¹⁵⁾

물론 중국의 TPP 참가가 실제로 공식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아태지역 내 광역FTA에 자국이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TPP에 참가하던지 또는 중국이 주도하는 광역FTA가 TPP를 포괄하던지 간에 어떻게든 역내 광역경제통합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2. 미국의 정책유연화 가능성

미국도 RCEP와 TPP가 서로 대립하면서 길항관계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며,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할 때, 중국이 참가하지 않는 TPP는 그 효과가 그만큼 적을 것이기에 미국도 중국의 참가를 고려할 수 있다.

2012년 미중 간 무역총액은 5,360억 달러로 중국은 미국의 두 번째 무역상대국이고, 미국은 중국의 첫 번째 무역상대국이다. 또한 미국의 대중 직접투자 누적액은 700억 달러에 달하고, 2013년 1-9월 대중 직접투자도 29억 달러로 21.3%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직접투자는 200억 달러, 대미 증권투자는 약 1.3조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미중관계에서 무역투자 이슈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현재 TPP 참가국 가운데 북미 3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GDP 합계가 전체의 약 96%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TPP가 NAFTA의 아태지역 확대판이라 평가할 수는 있지만, 아시아 비율

15) FTAAP가 실현될 경우 2025년 중국의 GDP는 2007년 기준보다 6,999억 달러 증가함으로써 미국 2,952억 달러, ASEAN 2,307억 달러, 일본의 2,279억 달러, 인도 2,262억 달러, 한국 1,318억 달러 등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혜택을 거둘 것으로 평가되었다(Petri 2013). 미국 국립경제연구소와 중국 사회과학원의 공동 연구보고서는 TPP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다분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중국의 TPP 참여는 중국에게 저비용 고수익의 결과로 될 것이라 평가하였다(Li Chunding 2012, 4-5).

이 매우 적기 때문에, 중국이 빠진 현재 상태로는 TPP가 아태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경제통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즉 중국의 참여 없는 TPP는 진정한 FTAAP로 결코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TPP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시장의 개방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TPP가 타결된 이후에 다른 APEC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마침내 중국도 TPP의 틀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TPP에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방도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ASEAN의 TPP 참여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세계 GDP규모로 볼 때, ASEAN 10개국의 비중은 단지 4.33%에 지나지 않지만 경제성장세가 뚜렷하여 6억 명의 역내 인구를 고려할 때 향후 소비시장으로 잠재성이 크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서로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이 때문에 미국은 2012년 11월 미·ASEAN 정상회의에서 <미국·ASEAN 확대경제대화이니셔티브>(E3 Initiative) 개시를 표명하였는데 ASEAN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문턱을 낮추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의 참여를 용이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TPP에 일본이 이미 참여함으로써 TPP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일본의 참여는 협상구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TPP는 당초 목표했던 만큼의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지적권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규범 등에서 일본의 주장이 강해 미국은 그 문턱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인교 2014, 16). 이 또한 중국의 참여를 용이하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

결국 RCEP와 TPP는 모두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RCEP는 말할 것도 없고 TPP도 그 이상을 관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TPP와 RCEP가 서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양자 모두 참여에 대해 개방적이기 때문에 장차 회원 간 관계가 깊어

16) IMF 전망에 따르면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6%로 전망되는 가운데 ASEAN 국가들은 2.5-7.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한국무역협회 2014a, 41).

질 것이고 회원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중국이 향후 정식으로 TPP 참가를 요청한다면 미국이 실제로 이를 적극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러나 중국을 배제한 아태지역 광역FTA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참가를 검토할 것이고, 또한 중국 참가의 조건이 되는 문턱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3. ASEAN의 통합노력 가능성

ASEAN은 일부 가맹국의 TPP 참가가 지역의 결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미국이 TPP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빼앗기고 ASEAN이 주변화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馬田啓一 2013).

태국이 이미 TPP 교섭 참가 의향을 표명하였고, 필리핀도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의 TPP 참가는 대미 수출증대 등 무역자유화의 장점과 대중 의존 탈출, 미국과의 관계강화라는 정치적 이유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불참가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APEC에 가맹하지 않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APEC 비가맹국의 TPP 참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참가할 수도 없다.

이처럼 TPP 참가와 불참가로 이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경제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ASEAN으로서는 현재 이런 균열을 어떻게 봉합하면서 AEC를 실현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사실 ASEAN에서 중국문제와 미국문제는 가장 중요한 골칫거리 중의 하나이다. TPP가 대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라면, RCEP는 대중 관계의 문제이다. 현재 ASEAN이 TPP로 인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남중국해와 RCEP를 둘러싼 ASEAN의 대응을 돌아볼 때, TPP 문제도 조정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즉 2012년 7월 9-13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ASEAN 외무장관회의는 중국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와 대중국 정책을 둘러싼 의견대립으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못하였고, 이는 사실상 ‘공동체로서 ASEAN’의 취약

성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직후 ASEAN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ASEAN의 6가지 원칙에 관한 ASEAN 외무장관 성명”을 발표하고, ASEAN이 경제통합의 중심적 역할(central role)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ASEAN은 아시아 외환위기, IT 버블 붕괴 등 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통합의 속도를 증가함으로써 ‘중심성(ASEAN centrality)’ 유지에 힘써왔다. ASEAN이 계속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ASEAN의 경제발전과 함께 동아시아경제권 형성의 주도권을 RCEP로 담아내는 것, RCEP를 보다 기업친화적인 FTA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日本貿易振興機構 海外調査部 2012, 39).

결국 ASEAN은 남중국해와 RCEP 문제에서 ‘ASEAN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ASEAN의 경제발전을 모색하는 데 첫 번째 중점을 두었다. 이는 결국 TPP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ASEAN 국가들이 RCEP와 TPP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ASEAN이 단일적 중심성을 갖는다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TPP와 RCEP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적어도 ASEAN이 그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TPP와 RCEP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ASEAN의 노력 자체만으로도 단일적·상보적 광역FTA 형성을 향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 한국의 적극적인 교량역할 가능성

한국은 2004년 4월 칠레와의 첫 번째 FTA를 발효한 이래 2014년 11월 현재까지 총 9건, 47개국과의 FTA를 체결·발효하는 등 EU 및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으며, 한국, 호주를 포함한 5건을 타결하고, 5건은 협상진행 중에 있다.¹⁷⁾

특히 한중 FTA가 타결·체결되면서¹⁸⁾ 이것이 일본에게 상당한 자극요

17) <http://www.fta.go.kr>. (2014년 11월 15일 검색)

18) 2012년 5월 14일 제1차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는 2014년 7월 3일 한중 정상회담(서울)에서 연내 타결에 대한 사실상 합의를 이루고,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 APEC정상회의에서 실질적 타결이 공식 선언되었다.

인으로 작용하고, 한일 FTA 또는 한중일 FTA의 성사에 중요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로 한국이 일본과도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국은 세계 4대 주요 경제권 모두와 FTA를 체결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이로써 한국은 양자FTA 네트워크 허브전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다수의 양자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네트워크에서 허브로 부상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경제교류가 많지 않았던 소규모 국가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특히 한미 FTA 체결 이전 한국의 FTA 교역 비중은 14.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FTA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FTA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큰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한미 FTA 및 한중 FTA로 이어졌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지역 내 경제통합이나 선진 거대경제권 간 FTA가 추진되는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통상전략도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한미 FTA와 한중 FTA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도모하고,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산업계 대표와 정부가 함께 하는 상시 소통체계로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여 통상정책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내수시장이 작고 교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FTA와 같은 개방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한국무역협회 2014c, i - ii).

이와 같은 린치핀 전략은 한국이 한미 FTA와 한중 FTA를 기반으로 RCEP와 TPP 사이에서 조정과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RCEP 참가국인 한국은 이미 2013년 말 TPP 참여의향을 공식 표명하였으며, 현재 기존 참여국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국가가 TPP에 참여·가입하려면 참여를 원하는 국가가 기참여국 모두와 양자협의를 통해 참여 조건을 합의하고 컨센서스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TPP를 조속히 타결하기 위해 TPP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야 한국의 가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TPP 출범 이전이든 이후이든 한국의 참여는 실현될 것이다.

한미 및 한중 FTA 체결과 발효, 한국의 RCEP 및 TPP 참여, 한중일 FTA 협상 등 한국의 통상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에게 이는 새로운 기회이자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는데, 한국의 린치핀 역할 수행은 아태지역내 단일적·상보적 광역FTA 형성을 향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V. 결론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개의 광역FTA 움직임이 진영화되어 상호대립하고 충돌하는 시나리오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자의 참여국이 서로 많이 중첩될 뿐만 아니라, 역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라는 관점만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양자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다가 마침내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은 이제 비로소 제도적 통합의 첫발을 내딛고 있다. 역내 광역경제통합은 거시경제적 편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선진국 시장의 수요 감소를 대체할 역내 시장 창출,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경제협력관계 심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협력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반영하고 있다(이창재 2012, 3). 이러한 기대와 욕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RCEP, TPP, 한중일 FTA의 순기능적인 조화와 통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역내 관련국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RCEP와 TPP의 부조화는 아태지역 전체의 비용증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RCEP는 관세철폐와 무역투자규범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고, TPP는 중국과 아세안의 전면적 참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당장 FTAAP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TPP가 지류이면 FTAAP는 강”이라고 표현하였듯이,¹⁹⁾ FTAAP는 RCEP와 TPP

19)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11월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 발언.

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협정이다. 현재 중국이 FTAAP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원래 FTAAP에 관심을 보이고 지지를 보낸 건 중국보다 미국이 먼저였다. 2006년 미국이 깊은 관심을 보인 덕에 FTAAP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활기를 띠게 되었으나, 2008년 미국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표준으로 TPP에 관심을 보이고, 2009년 가입을 선언하면서 FTAAP는 추진동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TPP가 APEC 회원국 간의 광역FTA라면 FTAAP는 궁극적으로 TPP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을 모두 포괄하고 있고, 또한 심지어 RCEP 참여국 모두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다. RCEP 참가국이면서 APEC 회원국이 아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인도의 문제는 이들이 APEC에 가입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ASEAN 국가로서 이들의 APEC 가입이 문제될 수는 없고, 또한 인도가 갖는 경제역량을 감안할 때 인도의 지리적 위치가 문제될 수도 없다. 인도도 APEC이 지리적 범주로 삼는 아태지역 안에 있다. 그리고 APEC 회원국이면서 TPP에도 RCEP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 파푸아뉴기니, 대만, 홍콩의 문제는 FTAAP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앞서 중국이 TPP 참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도 유화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논설한 바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 TPP에 실제로 가입하고자 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TPP가 FTAAP로 발전하든 아니면 FTAAP가 TPP와 별개로 추진되든 간에, 중국은 적어도 아태지역의 단일적·상보적 광역FTA가 필요하며, 여기에 중국이 반드시 함께 하여야 중국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중국의 목표는 FTAAP이고, 이 점에서는 미국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FTAAP로 가는 도정에 TPP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은 결국 미국에게 넘어갈 것이므로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TPP를 우회하여 FTAAP를 직접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을 배제한 TPP를 고집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중국을 참가시키든지 아니

면 FTAAP로 나아가든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분명히 FTAAP는 역내국가 모두의 내쉬균형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TPP와 RCEP를 넘어 FTAAP를 향한 노력이 적극화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王雪峰 (2014). “중국의 관점에서 본 TPP와 RCEP.” 『성균차이나브리프』. 제2권 제2호.
- 이승주 (2013). “미중일 삼각구도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학』. 서울대. 제36권. 2호.
- 이창재·방호경 (2012).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2. No. 24.
- 임반석 (2014). “TPP와 동아시아 RCEP의 경합과 보완의 가능성.” 『한국동북아논총』. 제70호.
- 정인교 (2014).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시선집중 GS&J Focus』. 제173호.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a). “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 『IIT Trade Focus』. Vol. 13. No. 23.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b). “무역업계가 바라본 한국의 FTA 10년.” 『IIT Trade Focus』. Vol. 13. No. 20.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c). “한국 FTA 추진 10년의 발자취.” 『IIT Trade Focus』. Vol. 13. No. 18.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d).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4년 전망: 19개 경제권(69개국)을 중심으로.” 『IIT Trade Focus』. Vol. 13. No. 13.
- 한국 산업통산자원부.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2014년 11월 15일 검색)
- Baldwin, Richard and Masahiro Kawai (2013). “Multilateralizing Asian Regionalism.” *ADB Working Paper Series*. No. 431.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 Baldwin, Richard (2011). “21st Century Regionalism: Filling the Gap between 21st Century Trade and 20th Century Trade Rules.” *Policy Insight*. No. 56.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Bremmer, Ian (2010). *The End of the Free market: Who Wins the War Between States and Corporations?* Portfolio.
- CHOI Byung-il & LEE Kyounghee (2013). “Future of Trading Architecture in Asia Pacific: TPP vs. RCEP.” *KERI Brief* Vol. 13. No. 24.

- Davis, Bob (2011). "In Trade Talks, U.S. Targets State Subsidies." *The Wall Street Journal*. Oct. 26.
- Li, Chunding & John Whalley (2012). "China and the TPP: A Numerical Simulation Assessment of the Effects Involved." *NBER Working Paper Series 1809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IHS (2014). "China to Become World's Largest Economy in 2024 Reports IHS Economics." <http://press.ihs.com/press-release/economics-country-risk/china-become-worlds-largest-economy-2024-reports-ihs-economics>. (accessed on November 15, 2014)
- Petri, Peter A. (2013). "The New Landscape of Trade Policy and Korea's Choices."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 17. No. 4.
- Petri, P. A., M. G. Plummer (2013). ASEAN Centrality and ASEAN-US Economic Relationship. East-West Center.
- The Economist (2012). "State Capitalism: The World in their Hands." *The Economist*. Jan. 21.
-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1). "An Analysis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State Capitalism in China." http://origin.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10_26_11_CapitalTradeSOEStudy.pdf. (accessed on November 15, 2014)
- 李向陽 (2012). "TPP: 中國崛起過程中面臨的重大挑戰." 『國際經濟評論』. 第2期. 中國自由貿易區服務網. <http://fta.mofcom.gov.cn/index.shtml>. (2014년 11월 15일 검색).
- 黃海洲·周誠君 (2013). "新形勢下對外開放的戰略布局(中國金融四十人論壇)." 『上海經濟評論』. 7月.
- 關志雄 (2012). "經濟教室." 『日本經濟新聞』. 5月 24日.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kwan/10.html>. (2014년 11월 15일 검색)
- 關志雄 (2014). "TPP加盟を模索する中國." 『中國經濟新論: 實事求是』(RIETI). 1月 8日. <http://www.rieti.go.jp/users/china-tr/jp/ssqs/140108-1ssqs.htm>. (2014년 11월 15일 검색).
- 金堅敏 (2013). "中國のアジア經濟統合戰略: FTA, RCEP, TPP." 『研究レポート』(富士通總研(FRI) 經濟研究所). No. 412.
- 馬田啓一 (2014a). "メガFTAの潮流と日本の新通商戰略." 『國際貿易と投資』. No. 97.
- 馬田啓一 (2014b). "メガFTA 時代のWTO: 主役か、脇役か." 『國際貿易と投資』.

No. 95.

馬田啓一 (2013). “TPPとRCEP: ASEANの遠心力と求心力.” 『國際貿易と投資』.

No. 91.

西口清勝 (2014). “TPPとRCEP: 比較研究と今後の日本の進路に関する一考察.” 『立命館經濟學』. 第62卷. 第5・6号.

日本貿易振興機構 海外調査部 (2012). “東アジアの地域包括的經濟連携(RCEP)をどう見るか.” JETRO. 9月.

| 논문투고일 : 2014년 11월 15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12월 09일 |

| 게재 확정일 : 2014년 12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4 (2014)

Mega-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Convergence of RCEP and TPP

KANG Weon Sik

(Dept. of Chinese Studies, Catholic Kwandong Univ.)

While the mega-FTAs in the APR - RCEP, TPP and KCJ-FTA - are often thought of as the reflection of the US-China regional hegemonic rivalry, I think it is better to consider them of complementarity and harmonization from the following viewpoints:

First, we should fix the sight upon the economic aspects in so far as the mega-FTAs are the attempts to set up a new economic order. Second, the mega-FTA is emerging with the object of expanding the supply-chain and solving spaghetti-bowl problem within bilateral FTAs, so that RCEP and TPP also have to be harmonized and taken. Third, RCEP and TPP have the common aspects to cooperate and unify, such as, overlapping membership, common relations with APEC, mutual economic entanglement and so on.

China is already on the move to accelerate reform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prepare for TPP membership. The US cannot help inviting China to TPP with relative-favorable terms for the sake of inducing the change of the state capitalism and enlarging economic benefit of TPP. ASEAN whose members are split to two blocks is seeking the regional harmony and unity. Korea is attempting to serve as a linchpin to connect RCEP and TPP on the basis of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China.

Confrontation between the mega-FTAs will inevitably lead to

diseconomy. All relating countries should concentrate their efforts to make the most of harmony, so that the efficiency and economic benefits of the mega-FTAs could be maximized and eventually integrated unitarily.

- Key words: TPP, RCEP, FTAAP, region-wide FTA, KC-FTA